

“올림픽 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하라”

도·도 건설단체 전방위 압박 정치권·정부에 잇따라 요구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도와 도내 건설단체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

우선 정동기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지난주 도 출신 및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해 최근 도내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의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법 개정과 관계부처 협조 등 전방위적 의원활동을 요청했다.

또 철도 등 대형 SOC사업 발주기

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도 원주~강릉 복선전철 노반신설에 대한 도내 업체의 의무공동도급 참여 지분 확대 등을 건의했다. 건설협회 도회는 앞으로 동계올림픽 시설공사의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건설협회 도회 등 도내 건설단체와 대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동기 회장은 “동계올림픽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지역업체 우대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도 출신 및 도 연고 국회의원과 철도시설공단 등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역시 이번 주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등의 관계

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업체 우대조항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나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요구했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구체적인 지역업체 우대조항이 마련되는데는 정부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어서 도와 도내 건설단체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대한 정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령에 지역업체 우대기준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규정으로 적용되어 현재는 실제 우대방안을 마련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

정부 내년도 동계예산 1조492억원 투입

기재부 ‘재정투자 확대방안’ ... 경기장·인프라에 집중 배정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내년에 1조492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전년 대비 8,000억원 늘려 23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2013년 재정투자 확대방안’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SOC에 올해보다 4,164억원 증가한 9,492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에 올해 1,800억원보다 2,850억원가량 늘어난 4,65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에는 올해 86억원보다 914억원 늘어난 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SOC 투자가 지역경제 및 취약계층 고용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년도 재정투자 확대 방안을 2013년 정부예산안에 반영,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민왕기기자 wanki@



김 광 수

인제경찰서 경찰발전위원장

(주) 고려개발, 근화 대학원

얼마 전의 일이다. 조금 늦은 퇴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퇴근길에 경찰관들이 2-3명씩 짝을 지어 순찰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사는 인제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라 유독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다소 낯선 모습에 70년대 유신 정권 때의 일도 생각나고, 80년대 서슬 퍼렇던 군사 정권 때의 일도 생각나면서 아찔한 옛 추억이 떠올랐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20대 초반, 80년대 대도시에 잠시 살던 때로 기억한다. 길을 걷는데 다짜

불심검문과 인권 이야기

짜 경찰관들이 나를 잡아 세우더니 "가방 좀 봅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당황한 나는 "예"라고 묻자 다짜고짜 내 맥살을 잡더니 이른바 '닭장차'라 불리는 버스에 태우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내 가방을 샅샅이 뒤졌다. 나는 그때 대학생도 아니었고,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다짜고짜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다보니 너무 억울해서 그 후로 얼마 동안은 정말 경찰이라 하면 이가 갈릴 지경이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지금 경찰관이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마치 유행처럼 이른바 '물지마 범죄'가 번져갔다. 신문, 방송, 인터넷 할 것 없이 연이어 물지마 범죄, 성범죄가 기사가 보도됐고, 죄 없는 시민들과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한편 두건 수가 늘어갈수록 점점

불안해 지면서 '혹시 내가 사는 인제에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미 성장해서 대도시에 나가 생활하는 자녀들 걱정도 앞섰다.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순찰을 하고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보았다. 그렇게 불심검문을 벌이고 있는 경찰관들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맘이 편해졌다. 내 자녀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도 경찰관들이 저렇게 불심검문을 하고 있겠지 라는 생각과 함께.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다보면 '경찰의 불심검문 부활'이라는 제목 하에 서로서로 갑론을박하는 것이 보인다. 인권 침해니 하면 안 된다부터 범죄 발생 억제에 검증된 확실한 방법이니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솔직히 불심검문을 찬성한다. 물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내가 예전 우리나라의 암울했던 세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처럼 최근 불심검문이 맥살을 잡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니다. 단지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보니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다니는 사람,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걸러내겠다는 의도다.

이제 국민들이 공간(庫間) 쌓아 두었던 불심검문이라는 권력을 경찰에게 주면서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고 경찰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러한 국민으로부터 수입된 권력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해야”

대한건설협회 도회, 법개정 촉구

도내 건설업계가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정동기)는 최근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요구한데

이어 모든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도 연고 국회의원과 도출신 국회의원에게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도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현재 WTO협정에 따라 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84억원 미만의 공사에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는 모든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도회는 지방계약법 중 공동계약 내용을 개정,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동기 회장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18대 국회에 폐기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자간 수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철

↑ 환율 (원엔)	↓ 금리 (국채3년)	↑ 유가 (두바이유 21일·배럴/달러)
1435.99 (+7.42)	2.81 (-0.03)	111.33 (+0.34)

동계오륜 시설 차질 우려

내년 국비 1000억 지원 당초 예산 60%에 그쳐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관련시설 사업예산이 당초 계획의 60%에 머물러 예정된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24일 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관련 국비는 1000억원 정도 지원될 계획이다.

이는 도가 요청한 1599억원(경기장시설 978억원, 진입도로 621억원)의 62%에 불과한 예산이다.

도가 요청한 1599억원은 시설계획비, 보상비와 최소 착공비 등이 포함된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업차질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에 제외돼 일반국고 지원을 받아야 할 동계

올림픽 식수전용저수지 조성 사업비도 반영여부가 불투명해 내년에 사업착수가 가능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도는 동계올림픽 식수전용 저수지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에 30억원을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20억원을 삭감, 10억원만 기획재정부에 반영·요청했다. 이마저도 반영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도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비 지원이 도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며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도내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안을 확정 한 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은복 rio@kado.net



◇안현구 대한건설협회 본회 윤리위원(합자회사 대원 대표 이사)은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17대 윤리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한다.

